

5. 위원회의 유형과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자문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② 조정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③ 행정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④ 독립규제위원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해설] ① 자문위원회의 예시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청년위원회가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제장관조정회의,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있다. ③ 행정위원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다. ④ 독립규제위원회는 미국식은 아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한국은행) 등 독립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국무총리소속) 등은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본다. 주의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보는 견해와 독립규제위원회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규정). [정답] ③

[참고] 현행 위원회(2013.5 현재)

구 분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명칭변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관)
각 부처 소속	중앙노동위원회(노동부), 소청심사위원회(안행부)	
독립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한국은행)	

6.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③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④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해설] ② 해임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된다.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우 1/8,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4을 감액지급한다. [정답] ②

7. 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

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해설] ④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국회법 제84조 제6항). [정답] ④

8. 직위분류제의 출발에 영향을 미친 것을 모두 고르면?

- | | |
|---------------|---------------------------|
| ㄱ. 과학적 관리론 | ㄴ. 종신고용 보장 |
| ㄷ. 보수의 형평성 요구 | ㄹ. 실적주의(merit system)의 요구 |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해설] ㄴ의 종신고용 보장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직위분류제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정답] ③

9.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 을(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 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어지지 아니한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 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 간의 ㉣ 를 구성할 수 있다.

- | | ㉠ | ㉡ | ㉢ | ㉣ |
|-------------|-----------|-------------------|-------------|---|
| ① 행정협의회 | 자치단체장 협의회 |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 협의체 | |
| ② 지방자치단체 조합 |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 협의체 | |
| ③ 행정협의회 | 협의체 | 지방자치단체중앙 분쟁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 |
| ④ 지방자치단체 조합 | 협의체 | 지방자치단체중앙 분쟁조정위원회 | 행정협의회 | |

[해설] ㉠은 지방자치단체조합, ㉡은 협의체, ㉢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은 행정협의회에 각각 해당한다. [정답] ④

10. 다음은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국가가 납세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다.
- ㄴ.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 ㄷ.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 ㄹ.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 ① $\neg, \bot$
② $\neg, \exists$
③ $\bot, \top$
④ $\bot, \exists$

[해설] ㄴ과 ㄹ만 목적세이다. ㄱ은 지방소비세로 보통세, ㄴ은 지역자원시설세로 목적세, ㄷ은 지방소득세로 보통세, ㄹ은 지방교육세로 목적세이다. [정답] ④

11. 조직관계에서 수직적 연결을 위한 조정기제가 아닌 것은?

- ① 계층제 ② 규칙과 계획
③ 수직정보시스템 ④ 임시작업단(task force)

[해설] ④는 수평적 연결조정기제고 나머지는 수직적 연결기제에 해당한다. 수평적 연결기제에는 ① 정보시스템, ② 직접접촉, ③ 임시작업단, ④ 프로젝트 매니저, ⑤ 프로젝트 팀 등이 있다. [정답] ④

12. 행정통제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실제 행정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 ㄴ. 목표와 계획에 따른 통제 기준의 확인
- ㄷ. 통제주체의 시정조치
- ㄹ. 과정평가, 효과평가 등의 실시

- ①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②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③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④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해설] 행정통제의 과정은 $\text{ㄴ} \rightarrow \text{ㄱ} \rightarrow \text{ㄹ} \rightarrow \text{ㄷ}$ 의 순이다. [정답] ②

13.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 ② 직무 확장(job enlargement)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재설계의 방법으로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 ③ 고위관리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 ④ 직무 풍요화(job enrichment)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해설] ①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은 높고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은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조직 구성원에게 한 가지 주된 업무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계층을 세분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각 계층의 업무 범위가 좁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다는 것은 계층을 덜 세분화하는 것으로서, 각 계층의 업무 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하며, 업무 범위가 넓다는 것은 권한이 크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정답] ①

[보충정리] (1) 수평적 전문화(수평적 분업) = 직무확대와 반대개념, (2) 수직적 전문화(수직적 분업)=직무충실과 반대개념

		수평적 전문화	
		높음	낮음
수직적 전문화	높음	비숙련 직무	일선 관리직무
	낮음	전문가적 직무	고위 관리직무

14.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리더는 부하의 욕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하여 리더가 제시한 과업목표를 달성한다.
- ② 부하의 변화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부하를 리더로 키운다.
- ③ 부하의 자기 실현과 존중감 등 높은 수준의 욕구 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 ④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해설] ①은 거래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보상”이 키워드다.

[정답] ①

15. 제도화된 부패(institutionalized corruption)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부패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 ② 부패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
- ③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행동규범의 대외적 표방
- ④ 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의 일상화

[해설] ④ 케이든(G.E.Caiden)이 말하는 제도적 부패란 공모에 의한 조직부패라고 볼 수 있는데, 공직자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서 조직의 옹호를 받도록 제도화된 부패(예 병역비리)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패한 구성원이 조직의 옹호를 받는 반면에 공식적 행동규범을 고수하려는 구성원들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답] ④

16.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 ① 5급 일반직 공무원
- ②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공무원
- ③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 ④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해설] 시대에 뒤쳐진 느낌이 드는 문제이다. 법3조에 의하면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기능직공무원(2013.12.12 이후 삭제) 등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답] ㉡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③ 자치사무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고 공익을 해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③

18. 「국가정보화기본법」상 정보화책임관의 담당업무가 아닌 것은?

- ①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 ②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 ④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해설] ③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미래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③

19.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 ②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로 상향식(bottom-up)방식이다.
- ③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미래 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해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부처의 자율성은 높아지지만 예산의 흐름은 하향적이다. 즉 Top-down(지출한도 설정⇒각부처 자율편성⇒종합편성)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②

20. 집단적 문제해결의 전통적 방법을 수정한 대안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 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 -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들을 종합·정리하는 방법이다.
-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하므로, 이미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을 지양한다.
- ③ 변증법적 토론(dialectical inquiry) - 두 집단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안의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다.
- ④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method) - 개인들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 한 다음,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해설]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기법으로, 이미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정답] ②